

The image is a full-page background featuring a large American flag. The stars and stripes are prominent, with the stars on the left and stripes on the right. In the lower right portion, the US Capitol building is visible, illuminated from within, showing its iconic dome and classical architecture. The scene is set at dusk or dawn, with a soft, warm light. In the top left corner, the text 'GLOBAL ISSUE BRIEF' is written in a bold, sans-serif font. Below it, separated by a thin horizontal line, is the text '2026년 5월호' in a smaller font. At the bottom of this section, 'vol.34' is written in a bold, sans-serif font.

GLOBAL ISSUE BRIEF

2026년 5월호

vol.34



Editor's Pick

- **트럼프 정부, 기술보호를 위한
KYC(Know Your Customer)
규제 강화**

정은미 산업연구원
emjung85@gmail.com

트럼프 정부, 기술보호를 위한 KYC(Know Your Customer) 규제 강화

정은미 산업연구원 | emjung85@gmail.com



미래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와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주요국의 제도는 수출 통제에서 자본투자, 연구활동에 이어 기업에 대한 통제로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핵심기술에 대한 고객확인규제(Know Your Customer regulation, KYC)를 정리한다.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와 같은 "이중용도 핵심 기술"이 주요 경제안보 자산으로 강조되고 있다. 엄격하고 단순한 수출 통제와 고객 확인(KYC), 그리고 미국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경쟁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시대의 일부 규제를 폐지하면서도 KYC 기반 실사 의무는 오히려 더 촘촘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변화의 직접적 계기는 2022년 10월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누적된 "우회 사례"였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²⁾에 따르면 미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NVIDIA의 의도적으로 다운그레이드된 반도체 100만 개 이상이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에 유입되었고, 화웨이는 위장 회사를 통해 대만 TSMC로부터 200만 개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³⁾

이에 수출통제만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의 유출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도입한 제도가 바로 KYC 규제이다. 본래 KYC는 자금세탁방지과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거래 패턴, 자금 출처, 실소유

1) Remarks by Director Kratsios at the Endless Frontiers Retreat The White House April 14, 2025 /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4/8716/>

2)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CSIS

3) CSIS, "The Architecture of AI Leadership: Enforcement, Innovation, and Global Trust," February 13, 2026. <https://www.csis.org/analysis/architecture-ai-leadership-enforcement-innovation-and-global-trust>

주(UBO) 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한 규범이다. 미국은 이 규범을 반도체 보안법 (Chip Security Act)에 적용하여 칩 제조사, 파운드리, OSAT(외주 반도체 조립·테스트), IaaS 클라우드 사업자 등에게 "누가 진짜 최종 사용자인지"를 거래 전에 확인하고, 의심 정황(red flags)이 있으면 거래를 보류 혹은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럼프 2기의 기술보호는 "규제 단순화 + KYC 강화 + 사례별 심사"로 요약된다. 2025년 5월 13일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Diffusion Rule을 공식 폐지하는 동시에 동시에 "수출주체가 스스로 거래 상대를 검증해야 한다"는 실질적 의무를 강화했다. 이는 정부의 행정 부담을 일부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직접 모든 거래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KYC 규제는 "기술-금융-자본"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 최근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데, 상무부(BIS), 재무부(OFAC, OISP, FinCEN), 법무부(DOJ)가 수출허가-금융제재-자본통제-형사집행으로 전주기를 분담하는 다층적인 거버넌스에 기반하고 있다.

표 1 미국의 고객확인(KYC) 규제

| 부처 | | 법·제도 | 주요 역할 |
|-------------------|--------------------------|--|---|
|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통제 IFR(2025.1) 가이드라인(2025.5) Entity Lis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칩 수출 고객 실사 IaaS의 고객 실사 |
| 재무부 | 해외자산통제실 (OFA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DN 명단 행정명령 13694·14105, IEEP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제재 자산 동결 |
| | 투자안보실 (O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명령 14105 (OISP, '25.1 발효), COINS Act('25.12 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對中 첨단기술 투자 신고·금지 |
| |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 FinCE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SA(은행비밀법) IaaS KYC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KYC 의심 거래 분석 |
| 법무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eration Gatekeeper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 수사·기소 |

출처 : 산업연구원 정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KYC 규제의 1차 소관 부처이다. 2025년 1월 16일 공포되어 1월 31일 시행된 잠정최종규정(IFR, Interim Final Rule)에서 파운드리와 OSAT 기업에 대해 첨단 컴퓨팅 IC에 관한 신원확인, 고객실사, 분기별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⁴⁾ 이어 5월 13일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적색 신호(red flags)"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⁵⁾ 적색 신호를 인식한 기업은 거래를 진행하기 전 추가 실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BIS에 보고해야 한다.

BIS는 한편으로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제공자에게도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CIP) 도입을 의무화하여 외국 계정 소유자와 실소유주의 신원을 KYC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OFAC 제재 명단과 대조하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통한 원격 컴퓨팅 접근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어 2026년 1월 13일 BIS는 중국 및 마카오로 수출되는 특정 첨단 AI 칩(예: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에 대해 기존의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에서 '개별 사례 심사(Case-by-Case Review)'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다.⁶⁾

미국 재무부는 금융과 자본 측면에서 BIS의 수출통제를 보완한다. 재무부테러·금융정보국(TFI⁷⁾) 산하 OFAC이 미국 금융제재의 핵심 집행기관으로, 2025년에 1,300명 이상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고 14건의 공개 집행 조치를 취했다. OFAC은 제재 대상 인물·기관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한 모든 법인은 자동으로 함께 차단한다. 이에 따라 우회 회피가 어려워지고 계열사·자회사까지 제재효과를 확장할 수 있다.

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16/2025-00711/implementation-of-additional-due-diligence-measures-for-advanced-computing-integrated-circuits>

5) U.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Industry Guidance to Prevent Diversion of Advanced Computing Integrated Circuits," May 13, 2025. <https://www.bis.gov/media/documents/ai-counter-diversion-industry-guidance-may-13-2025.pdf>

6) <https://www.bis.gov/press-release/department-commerce-revises-license-review-policy-semiconductors-exported-china>

7)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2004년 설립된 TFI는 산하에 해외자산통제실(OFAC), 정보분석실(OIA), 테러자금·금융범죄실(TFFC), 재무부 자산몰수실(TEOAF),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로 구성된다.

재무부의 해외투자안보프로그램(OISP,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은 2025년 1월 2일 발효되었으며, 2025년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⁸⁾"에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격상되었다. 대상 기술은 기존 반도체, 양자, 인공지능 3개 분야에서 고성능 컴퓨팅·슈퍼컴퓨팅과 극초음속 시스템까지 확대했다.⁹⁾ 규제 대상은 중국에서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마두로 정권 베네수엘라 등으로 확장했고, 향후 2년간 매년 1억 5천만 달러를 재무부에 배정하여 인력과 행정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OISP가 단발성 행정명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했음을 의미한다.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은 미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은행비밀법(BSA)에 따라 금융기관의 KYC·AML 규칙 집행을 담당한다. 의심 거래보고서(SAR), 통화거래보고서(CTR) 수집·분석, IaaS 제공자에 대한 KYC 규정 시행 지원,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금융 대응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부처 간 다층 구조의 가시적 성과는 법무부의 형사 집행에서 드러난다. 2025년 12월 8일 미국 법무부는 "Operation Gatekeeper"라는 작전명으로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NVIDIA H100, H200 GPU 밀수망을 적발했다. 형사고소상의 혐의일 뿐이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조사 대상,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¹⁰⁾ 이 외에도 2025년 7월 DOJ와 BIS는 미국의 주요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기업이 Entity List 등재 중국 기업에 불법 수출한 사건, 11월에는 알라바마에서 말레이시아·태국을 거쳐 중국으로 NVIDIA A100 GPU 400개를 밀반출한 사건, 2026년 1월에는 유럽 기업이 중국 자회사를 통해 Entity List 등재 파운드리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불법 이전한 사건을 적발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의회는 2026년 3월 26일 칩 보안법(Chip Security Act)을 승인했다¹¹⁾.

8) The 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COINS) Act

9)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21일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메모를 통해 향후 통제 분야를 생명공학, 항공우주, 첨단제조, 지향성에너지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10) <https://www.justice.gov/opa/pr/us-authorities-shut-down-major-china-linked-ai-tech-smuggling-network>

11) Bloomsbury Intelligence and Security Institute, "AI Chip Smuggling: The Limits of US Export Controls," April 6, 2026.

미국의 다층적 KYC 규제는 기업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기업들은 기술이전과 투자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 등 추가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 기업은 "통제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이 설정한 KYC 의무가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확장하면서 사실상 "통제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체 KYC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미국의 KYC 기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KYC와의 "규제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¹²⁾.

12) EU는 2025년 1월 미국의 OISP와 유사한 자체 해외투자 심사 권고를 발표하고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6월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